위 지사 "칭다오 협약 파기 아닌 변경 추진"

21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첫 간담회서 재차 강조
행정체제 개편엔 "해소 필요… 제2공항 문제 정리 후 논의"
데이터센터 신중한 공론화 필요성에는 "심사숙고해 풀 것"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12개 시민사회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혈세 낭비 논란에 직면한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 문제와 관련해 협약파기가 아닌 협약변경 추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주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간담회에서 위성곤 지사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간담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90분간 특정 의제 없이 현안에 대해 자유질의·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영철 대표는 "칭다오 항로 문제가 도민사회에서 크게 회자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당장 구상권 청구를 위한 서명에 돌입할 계획에 있다"며 "초기 계획단계에서 수요 예측도 부실하는 등 협약 체결 과정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 지사는 "이제 이 문제는 국제적인 외교관계가 됐다. 국가 간의 협약에 준한 내용으로 구성된 협약을 제주도가 파기하면 모든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약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로 간에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과정 안에서 도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개선"이라고 밝혔다.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위 도정에서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위 지사는 "도지사에 출마하고 나서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들여다보게 됐다. 행정체제는 어떻든 간에 해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아니면 읍면동장 직선제 등 현실적으로 행정 비효율성으로 인해 도민들이 체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지만 제2공항 문제를 정리한 이후에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산업의 핵심공약으로 내건 '제주 그린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박성인 다른제주연구소 운영위원장은 "40M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추진하는데, 우리는 시작이지만 국제적으로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 사업은 아니다. 신중한 공론화를 통해 논의하면서 추진돼야 하며 섣불리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위 지사는 "데이터센터의 신중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한다"며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사회적 인프라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며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그 시대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사숙고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중산간·도유지 곶자왈을 개발에서 배제해 보전자산으로 관리,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일원화,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 4·3 유적지 관리 인력과 해설사 확충, 유적지 안내 온라인 플랫폼 마련, 4·3 예술사업의 안정적 지원 확대, 낮은 여성 이장 비율 개선, 도정 운영에 대한 시민 참여 방안, 저임금·비정규직 구조 개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도지사 직속 인권 전담 조직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한림 한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동'

연장 380m, 폭 8m 규모… 이달 말부터 본격 추진

제주시가 이달 말부터 한림 한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나선다.

시는 한림읍 주거지역 내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한수리(소로2-6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8월 말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장 380m, 폭 8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2024년 11월 1차분 공사를 준공했다. 하지만 이후 잔여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후속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잔여 사업비 3억원을 확보, 이달 말부터 후속 공사를 재개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한림읍 주거지역 내 교통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고, 이동 동선이 단축돼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금탁기자

도,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9월 한 달간 4만여마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한 달간 도내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624개 농가와 115농가에서 각각 사육 중인 소 3만7111마리와 염소 4304마리 등 총 4만1415마리다. 단, 농가가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한 시점으로부터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임신 말기인 소는 농가 신청에 따라 접종을 미룰 수 있다.

제주도는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을 키우는 소규모 농장에 대해선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16개 접종지원반 40명을 투입해 접종을 지원한다. 반면 전업 규모 농가는 다음 달 1~14일 자체적으로 접종한다. 단, 고령 등으로 자체 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접종지원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돼지는 농가별 자체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상시 예방접종하고 있다.

도는 접종을 마치고 4주 뒤 백신항체(SP항체) 양성률과 감염 항체(NSP항체)를 검사한다.

항체 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와 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이상이다. 기준에 미달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뒤 다시 항체 검사를 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영어교육도시~서광서리 연결 도로 9월 개통

서귀포시는 총 사업비 14억3000만원을 투입한 '구억~서광 간(구서선) 농어촌도로 317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을 오는 9월 마무리하고 전면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어교육도시 내 NLCS 제주와 지방도 1121호선 서광서리 마을운동장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 영어교육도시 접근성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서광서리 마을에서 영어교육도시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등 교통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안덕면 서광서리 마을운동장에서 영어교육도시 대정읍 구억리 구간을 연결하는 연장 0.21㎞, 폭 8m 규모의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했다.

백금탁기자

자리잡이 조업 지난 22일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자리잡이 조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서귀포시, 고수온기 양식장 기생충 구제제 지원

서귀포시는 8~9월에도 고수온이 지속됨에 따라 양식생물의 기생충성 질병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기생충 구제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고수온 특보가 지난 8월 3일부터 경보 단계를 유지 중으로, 고수온이 장기간 지속되면 양식생물의 생리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면역력이 저하돼 각종 질병과 기생충성 피해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에 시는 7850만원을 투입해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생충 구제제를 지원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시 농지대장 일제정비… 2만7946필지 대상

제주시가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 등의 현행화를 위해 농지대장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는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12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 2만7946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농지대장에 등재돼 있으나 토지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농지 ▷농지대장 자동 생성 농지 ▷소유인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농지 ▷전용허가 기록이 있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있는 농지 등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정비 대상 필지의 소유권 변동 사항, 시설물 설치 여부, 농지 임대차 여부, 농지 이용현황, 경작현황 등이다.

시는 농지정보시스템(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정비를 추진 중이다. 또한 정비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면 소명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필요 시에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도 함께 홍보해 농지가 합법적으로 농지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